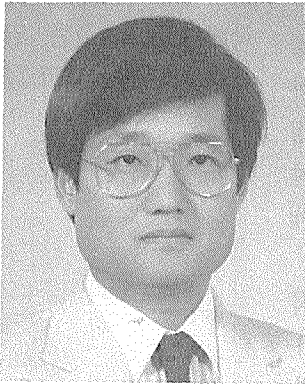


동북아 경제 협력

1.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지금 국제정치상에는 2가지의 중요한 움직임-세계화와 지역화-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란 무역이나 기술이전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한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를 말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70年代' 중반부터 데탕트의 심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세계화가 초래한 상호 공존·공생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역화란 지역간의 차별적인 교역 체제, 또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즉, 특정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최우선 시하여, 역외국가들과의 차별 대우를 제도화하는 추세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화 움직임은 1991년에 가시화



이 홍 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지역은 지난 30여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는데 최근 들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구소련의 적극적인
경제발전노력에 비추어 향후에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된 유럽공동체(EC)의 단일 시장화와 1992년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 GNP의 약 60%, 세계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적 결속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국제 정치나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지구상에는 3개의 커다란 경제권 - 유럽, 북미와 동아시아- 이 형성되어 상호 경쟁과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권 형성은 해당 국가들이 원칙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아직까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아·태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고 경제 발전 정도, 체제나 문화 측면에서 국가간의 이질성이 클 뿐 아니라, 각국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유럽이나 북미 지역과 같이 경제 통합에 관한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이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 국가이고 지역 경제 협력에 관련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과 일본간의 만성적인 경제적 갈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태 지역에서 경제 협력이 비록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지역의 급속한 지역화 추세를 의식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협력의 범위를 좁혀 제한적·국지적 성격을 띤 소지역 협력체 구성 방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해당 국가의 숫자가 적을수록, 국가 간에 지역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도출이 용이하고, 소지역 통합은 궁극적으로 아·태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경제 협력체 구상이 최근 들어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대만, 홍콩, 중국(특히, 동부 연안지역 및 동북 3성), 일본, 러시아(특히, 극동지역)와 남·북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지역은 주지하는 대로 지난 3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는데, 최근 들어 중국 경

제의 고속 성장과 구소련의 적극적인 경제 발전 노력에 비추어 향후에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한결같이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 - 특히, 제조업 부문에 - 을 채택하여 고속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최대 수출 시장이 북미와 유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경제권의 형성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 산업의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지역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동북아 지역 내의 경제 협력 강화 필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크게
두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즉 쌍무차원과 다자간 방식이다.**

요성이 매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어적 측면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경제 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지역 내에는 국가 간에 경제 협력을 용이하게 할 객관적인 환경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 연계성,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내에는 국제 정치상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여년간 경제교류(특히, 쌍무차원)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주의권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인해, '80年代 말부터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역 국가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유럽이나 북미지역과는 달리, 상호의존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 - 예를 들면, 환경오염,

기술 이전, 물적·인적 자원 교류-을 다룰 제도적 장치 또는 기제(mechanism)의不在로 말미암아 경제협력의 증대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술한 이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와 함께, 지역내 경제협력체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3. 동북아 경제 협력의 추진 방안

지역 경제 협력은 크게 2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 될 수 있다. 쌍무차원과 다자간 방식이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앞서 말한대로 지난 20여년간 쌍무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다자간 방식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소 수교(1990년), 남·북한 기본 합의서 체결(1991년)과 한·중 수교(1992년)등은 일·북한, 미·북한 및 남·북한 교류 협력 증대를 가능케 하여,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을 쌍무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

**다자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류확대, 경제통합과
블럭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그 요체는
경제협력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과실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는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자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류의 확대, 경제 통합과 블럭 형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요체는 경제협력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과실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다자간 경제협력의 추진은 EC나 NAFTA 처럼 경제공동체(또는, 블럭)과 같은 지역 경제의 통합을 위한 기제

(mechanism)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제는 궁극적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제는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자원 공동개발 및 환경 보존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다룰수 있어야 하며 구속력이 있는 조치와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지역내에서 경제협력체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가지 이유로는, 지역의 국가간에 다자간 경제협력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공동 인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중국, 북한과 러시아는 지역 경제협력을 자국의 지역개발사업에 서방 진영의 참여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은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골자로 하는 엔블럭의 형성을 통해 유럽과 북미의 블럭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홍콩과 대만은 지역내의 모든 중화인의 통합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요체로 여기고 있다. 또다른 이유로는, 역내 국가간에 상호 이해의 부족과 상호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일차적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배 또는 사회·정치·경제 제도의 상이성과 경제 발전 단계 및 정책 목표의 차이로 부터 유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아직도 폐쇄적인 자급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도 비록 시장 경제 체제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 제도의 모순과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남·북한 대치 상황과 중·대만 통일 문제의 미해결 등이 지역내에서 다자간 경제 협력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내의 미해결 분쟁요소 -예를 들자면, 일·러간의 북방도서 문제나 남·북한 통일(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다자간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부터 국가간의 마찰과 긴장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적에, 동북아 지역 협력체 구성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초기 단계에는 협력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축소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동북아 지역은 다시 3개의

소지역으로 분류되곤 한다. ① 환동해 지역 ② 환황해 지역 ③ 중화 경제권, 이 중에서 환황해 지역은 경제협력 기구의不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제協력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한·중 경제교류의 비약적인 확대가 이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남은 2개 소지역인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협력체 구성에 따른 기대 효과가 보다 큰 지역은 중·일·러시아와 남·북한을 포함하는 환동해 지역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당분간 이 지역내에서의 경제協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상정할 적에, 이 지역내에서도 초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한된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역내의 경제협력을 本格化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90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비록 막대한 개발 비용을 필요로 하나, 잠재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다. 우선, 이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요소 - 특히, 노동력과 자원 - 와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면 이 지역이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서 이 지역이 제 2의 홍콩이나 로테르담으로 까지 발전될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개발 계획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시험장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적 접촉을 강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 궁

극적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 협력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協력의 모델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 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上記한 방식의 다자간 협력의 추진과 함께, 쌍무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교류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 협력에 대한 공동인식의 창출이 용이해져,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협력체 구축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협력체 구성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단계에는 협력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과 남·북한 관계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세계적인 경제 불려화 추세에 비추어, 효과적인 지역 경제 협력의 추진은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 한국의 국가 이익은 물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합시다.**